주요업무 보도 참고자료(사업별 상세설명)

1. 국토환경관리강화

1-1. 생태면적율 제도 도입으로 도심지내 생태공간 확보

1-2. 사전입지상담제도 도입

1-3. 지역단위 환경성 평가제도 도입

2. "한반도 생물자원 분포도" 제작

3. 국립공원별 1공원 1멸종위기종 복원사업 추진

4.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(BTL 사업) 추진

5. 농어촌 노후 간이상수도 개·보수 및 노후급수관 초소형로봇 활용 갱생·교체 추진

6. 4대 환경경영기법 확대 보급(환경리스크 평가, 환경보고서, 환경회계, 환경성과평가)

7. 환경보건 강화

7-1. 국민 혈중의 중금속 농도 및 환경성질환 실태조사

7-2. 민감계층 사용 제품의 유해성 규명

1-1 생태면적율 제도 도입으로 도심지내 생태공간 확보

□ 현황 및 문제점(개선 필요성)

○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한 도시생태계의 파괴와 생활의 질 저하로 도시생태계 회복·창출방안 마련이 시급

- 도시열섬효과에 따른 기온상승, 토양 포장(콘크리트화)으로 인한 지하수위 감소 및 도시하천 건천화, 습도감소로 도시생활환경의 질 저하

※ 서울의 경우 불투수 토양의 비율이 49%이며 지난 50년간 평균 기온은 약 2℃ 상승, 평균습도는 10% 감소

○ 기존의 녹지율 확보와 같은 환경성검토 기법만으로는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(자연순환기능) 개선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음

○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조성 단계에서부터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을 정량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 방안 필요

- 콘크리트 등의 불투수포장 면적을 줄이고 자연순환기능 면적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담장녹화, 옥상녹화, 녹색보도, 녹색주차장(Green Parking) 등과 같은 생태적 기능을 가진 '생태면적'의 증대를 유도·의무화하는 계획기법 필요

생태면적률의 개념

◦ 공간계획 대상면적중에서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면적비율

- 생태면적률(%) = (자연순환기능 면적/전체면적)×100

※ 자연순환기능 면적은 수분의 증발산·우수의 투수 및 저장능력 및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건전한 생태계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토양면적을 말함

□ 추진계획

○ 신도시 조성,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시 생태적 순환기능과 생물 서식 가능성을 갖는 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연구(연구용역, '05.3~10월, 수행기관 : 한국건설기술연구원)

- 생태면적률은 공간의 유형별로 가중치를 부여(예 : 자연지반녹지 1.0, 인공지반녹지 0.5~0.7, 옥상녹화 0.5, 투수포장 0.2~0.3 등)하여 산출하고 건축유형 또는 용도지역별로 차등 적용

※ 서울시에서는(예 : 단독주택 20%, 공공주택 30%이상 등) 공공기관이 건설 공급하는 주택 및 건축사업에 '04.7부터 적용

○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도시 조성, 택지개발 등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시 적용할 생태면적률 기준을 마련(10월)

○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수렴(10월~11월)

○ 신도시 조성,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할 생태면적률 기준 마련 시행(12월)

□ 기대효과

○ 신도시 조성이나 택지개발시 일정 녹지율의 확보와 함께 인공지반녹화, 옥상녹화, 담장녹화, 투수포장, 녹색주차장 등의 생태면적율을 확보함으로써 도시생태 복원, 생물서식공간의 확보, 도시생활환경의 질 개선 기대

참고 : 서울시 적용사례

〔참고〕

서울시 적용사례 - 적용기준

건 축 유 형	생태면적률 기준	비 고
단독주택 〔개발면적 660㎡ 미만〕	20%이상	
공공주택 〔개발면적 660㎡ 이상〕	30%이상	
일반건축물 〔업무, 판매 등〕	20%이상	공장 등 공해 유발건축물 제외
공공시설 및 건물	30%이상	
교육시설 〔초, 중, 고등학교, 대학교 등〕	40%이상	
녹지지역 시설 및 건축물	50%이상	

1-2 사전입지상담제도 도입

□ 목적

○ 개발사업 계획수립단계에서 '사업입지 예정지'의 입지환경여건 예비검토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

□ 배경

○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절차 완료 전에 토지를 매입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 부적합으로 인한 부동의시 사업자가 초기 사업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 발생(※ 붙임 참고)

□ 추진방향

○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에 대해 각 청의 인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간과 방법을 정하여 상담

○ 민원인이 제시하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명백히 부적정한 입지를 스크리닝(screening)

□ 추진계획

○ 유역청(지방청)별 자체 추진계획 수립 · 보고('05.3.31)

○ 분기별로 순회 워크샵을 개최하여 사례 공유 및 제도개선

○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입지상담제의 통합적 홍보 추진

□ 기대효과

○ 부적정 입지의 신속한 스크리닝을 통해 사업자의 불필요한 투자 방지

○ 상담내용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반영 가능한 경우 공식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

〔붙임〕

사전 입지상담제 도입 배경

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전에 토지를 매입한 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과정에서 환경상의 문제점으로 입지부적합되어 **매입한 토지의 처분, 사업의 지연,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에 따른 수수료 낭비** 등 시간적·경제적 손실로 인한 사업자들의 불만 초래

【 사례 1 】

□ 사업개요

o 위　　치 : 경기 남양주시 일원
o 업종(규모) : 혼합음료 제조공장(20,000㎡)

□ 검토 결과

o 동 사업장은 왕숙천 수계에 입지하고 있으며, 잠실광역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약 16㎞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"산업입지개발지침" 관련규정에 의한 "개별공장설립 승인 및 입지개발기준"에 부적합하고,

o 특히, 왕숙천은 '04년도 평균 수질이 BOD 12.1㎎/L로 동 하천의 수질환경기준 Ⅱ등급(BOD 3㎎/L) 및 한강수계 수질관리 특별대책상의 목표수질(2005년까지 BOD 5.2㎎/L)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입지적으로 부적정함

【 사례 2 】

□ 사업개요

o 위　　치 : 경기 가평군 일원
o 업종(규모) : 식품가공 공장(13,800㎡)

□ 검토 결과

o 사업예정지는 생태자연도 1등급(녹지자연도 8등급이상 지역)이면서 경사도 30°이상의 급경사지역으로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주변 생태계는 물론 급경사지역에 대한 절·성토로 인해 자연경관의 훼손이 우려되므로 사업예정지로 부적합함

1-3 지역단위 환경성 평가제도 도입

□ 도입 필요성

○ 그동안 지역 전체의 환경용량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개별 사업별로 환경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역간 무질서한 난개발 초래

※ 사례 : ① 용인시의 경우 지역 전체의 환경용량을 감안하지 않고, 각 아파트 단지별로 환경성을 평가·개발함으로써 인구 및 교통집중에 따른 난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 대두

② 의왕시의 경우 영동, 서울외곽, 의왕~과천 등 3개 고속화도로(4개 I.C, 1개 J.C)와 2개 국도(국도 1호, 47호)선이 통과하면서 자연환경훼손은 물론 스카이라인 등 경관훼손으로 도로건설에 따른 난개발영향이 심각

○ 지역의 환경용량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개발계획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

□ 추진방향 및 계획

○ 환경훼손 심화 및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(예: 화성시)을 대상으로 일정기간(3~5년 단위) 추진될 지역개발계획을 종합하여 환경성을 평가하는 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('05년중)

- 지역 유형별 지표선정 및 모델선정

- 지역 환경용량 사례적용 및 제도화 방안 강구

○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적근거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('06년중)

□ 기대효과

○ 지자체별로 당해 지역의 적정 환경용량을 산정, 그에 맞는 개발계획 수립을 유도함으로써 난개발 방지 및 지속가능발전에 기여

2 "한반도 생물자원 분포도" 제작

□ 추진 배경

○ 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생물자원의 분포·서식 정보를 수록한 분포도 작성이 필요

- 생물자원의 정확한 서식·분포 정보는 생물자원의 보전·관리 세부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마련에 필수 사항

□ 문제점

○ 현재 전국 자연환경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분포도 작성이 미흡

- 반달가슴곰 등 일부 생물종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서식지 및 분포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태임

□ 사업내용

○ 멸종위기야생동식물(221종) 및 희귀종(700여종)은 '05년부터 분포도 작성 추진('05년~'07년)

- 생물종의 위치를 1/25,000의 전자 지형도에 표시
- 분포지역의 경우 이동성이 큰 동물은 격자를 사용하여 표시하고, 이동성이 적은 생물은 실선으로 표시

※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희귀 동식물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정밀조사('01~'06) 및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('97~'03) 결과 활용

○ 고유종(2,466종),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생물자원 등은 '14년까지 완료

- 고유종 분포도 작성을 위해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('06~'10년)시 GPS(위치정보시스템)를 사용하여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예정임

○ 생물자원 분포도를 개발과 보전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도록 Internet Web-GIS로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 실시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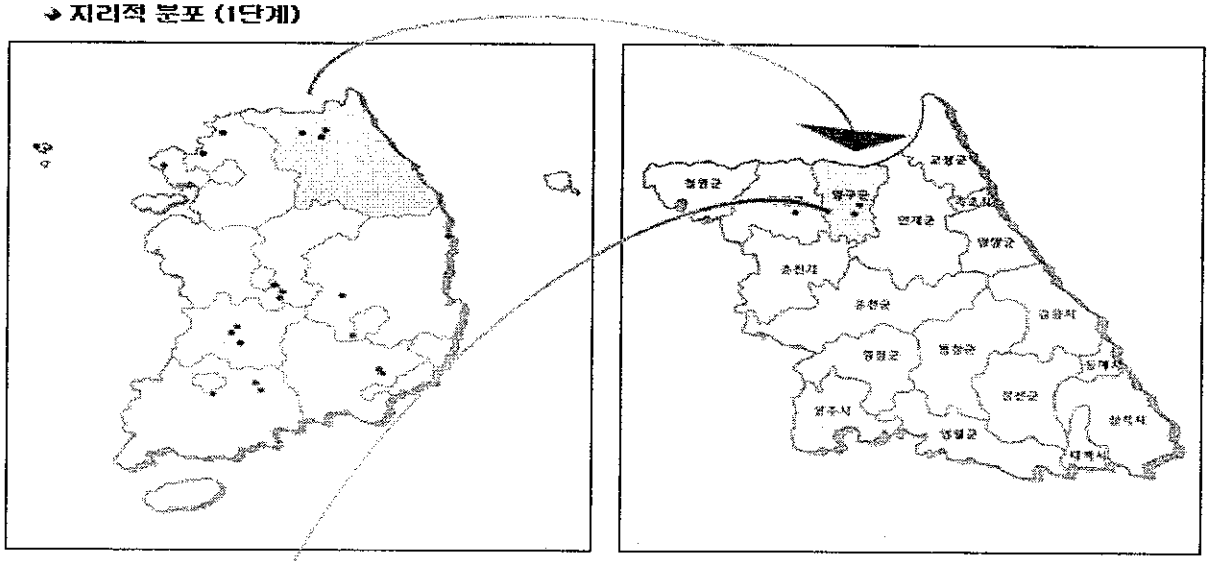
□ 기대효과

○ 희귀동식물의 정확한 위치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는 보호 의식을 고취, 개발사업자에게는 개발계획 수립시 고려 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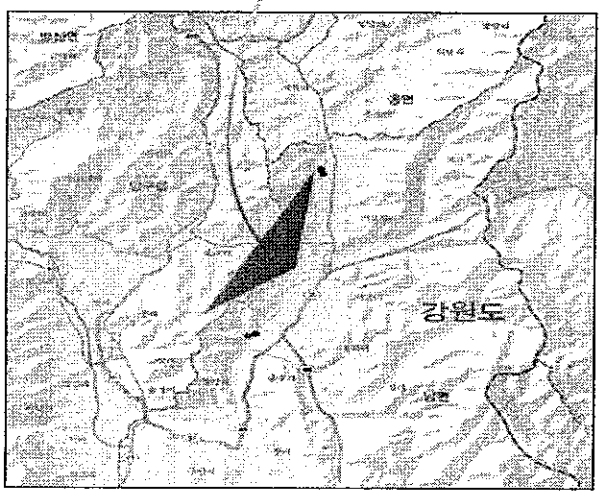
〔 참고 : 징거미새우(희귀종)의 분포도 작성 사례 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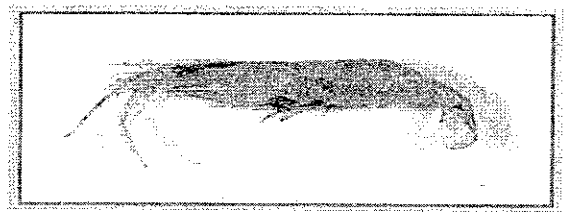
◉ 징거미새우 (사례)

➔ 지리적 분포 (1단계)



➔ 지리적 분포 (3단계)





■ **국명** : 징거미새우

■ **학명** : *Macrobrachium nipponense* (De Haan, 1849)

■ **과명** : 징거미새우과

3 국립공원별 1공원 1멸종위기종 복원사업 추진

□ 추진 경위

○ 국내서식 야생 동·식물 중 총 221종을 멸종위기 야생 동·식물로 지정, 관리

- 멸종위기에 처한 「멸종위기 야생 동·식물 Ⅰ급」 50종과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높은 「멸종위기 야생 동·식물 Ⅱ급」 171종, 총 221종을 지정(야생동·식물보호법, '05.2.10)

○ 지리산국립공원에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'01.9월부터 추진중

- 이 사업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,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야생 동·식물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에 크게 기여

○ 우수 서식권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추진 필요

- DMZ 및 국립공원은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 동·식물이 서식하는 온전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우수 서식권을 형성

- 각 서식권에 적합한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의 추진 필요

○ 우선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멸종위기종 복원 마스터플랜을 수립,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

- 국립공원별 생태특성에 맞는 복원 대상종 선정, 중장기 복원사업 추진 로드맵 작성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, 추진

※ 지리산(반달가슴곰), 오대산(사향노루). 월악산(산양), 덕유산(사슴) 등

□ 추진방향 및 계획

○ 「멸종위기 야생 동·식물 복원 마스터플랜」 수립 연구용역 추진 ('05.4~11월)

○ 연구용역 주요 과업내용

- 멸종위기 야생 동·식물 지정·보호 현황 및 복원 기본방침
- 멸종위기종 서식·분포 실태 및 서식권 분석
- 각 서식권별 멸종위기종 복원정책 수립
- 멸종위기종 복원 로드맵 작성
-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추진·관리 체계 수립

○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추진계획 수립·추진('05.12)

□ 기대효과

○ 멸종위기 야생 동·식물 복원을 통해 고유 생물자원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에 기여

4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(BTL사업) 추진

□ 개요

○ "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"이란 하수관거정비를 통해 민간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의 아이디어와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말함

※ BTL(Build-Transfer-Lease) : 민간사업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공공시설을 지은 뒤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고, 정부는 시설운영을 맡되 투자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리스료로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방식

□ 사업계획

○ 하수관거보급률을 '03년도 65.8%에서 '0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5%로 제고하여 상수원 수질 보전 및 침수피해 방지

○ 참여의사를 제출한 87개 지자체의 총사업비 56,140억원(8,824km) 중 '05년 계약금액은 1조원(1,570km) 규모로 추진

- '07년까지 총 5조 6천억원 규모로 추진

<연차별 투자규모>

(억원)

사 업 명	기준	합 계	연차별 투자규모			'08년 이후
			'05년	'06년	'07년	
하수관거 정비사업	물량	8,824	1,570	3,627	3,627	-
	협약	56,140	10,000	23,070	23,070	-
	집행	56,140	500	4,654	13,229	37,757

□ 기대효과

○ 고용 창출(하수관거정비 고용유발계수 15.3), 침수방지, 공중위생 향상, 상수원 수질 1~2급수 조기 달성 및 하수처리장 유입수량·농도 개선 등

※ 고용유발계수 : 연간 10억원 당 유발되는 고용인원

□ 환경부 T/F팀 구성, 환경관리공단 인원충원, 지자체 참여 등 문제점 해소대책 강구, 사업계획 확정('05. 3.) 및 사업추진('05~)

5 농어촌 노후 간이상수도 개·보수 및 노후 급수관 초소형 로봇 활용 갱생·교체 추진

〈 농어촌 노후 간이상수도 개·보수 대책 〉

□ 현 황

○ '04년말 현재 전국에 약 10,824개의 간이상수도 설치·운영중 (전체 인구의 3.8%인 187만명 이용)

- 이중 약 60%(6,561개소)는 '80년대 이전에 설치

※ 간이상수도(수도법 제3조) : 100인 이상 2,500인 이내(시설용량 20~500톤/일)의 주민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

○ 시설노후 및 관리미비로 '03년 민·관 합동 수질검사결과 대장균군·질산성질소 등이 초과(기준초과율 6.7%, 기존 정수장은 1.2%)

□ 문제점

○ 표층 지하수(80%), 계곡수(15.7%) 이용으로 안정적 수량확보가 곤란하고 축산폐수 등 주변 오염원에 취약

- 취수정 심도가 낮고 주변 수원보호시설이 없음

○ 시설설치 및 운영·관리 책임이 시장·군수(구청장)에게 있으나, 개소수 과다 등으로 전문성이 없는 마을대표(이장 등)가 관리

○ 시설개량은 지자체 고유사무에 해당되어 자체예산부담으로 대체 수원 개발 및 시설교체에 애로

□ 추진방향 및 계획

○ 2005년에 40억원을 지원하여 간이상수도 설치·유지관리에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체계 유도

- 암반관정 및 현대식 일체형 정수시스템 설치
- 지역별 통합, 전문수탁기관 수탁관리(IT기술 활용 및 비상주 순회관리)
- 운영관리실태를 평가·공개하여 주민참여 유도

○ 시설개량이 필요한 7,622개 간이상수도에 대한 연차별 개선대책 수립·시행 (3,036개소 일반수도 전환, 166개소 폐쇄 등)

- 시설 개체비용 국고 지원방안 강구(1개소당 최대 5천만원, 소요예산 50% 이내)

□ 기대효과

○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및 수질관리 강화로 대부분 낙후지역인 이용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

□ 관련 통계

[전국 간이상수도 설치연대]

단위 : 개소

계(개소)	70년이전	70년대	80년대	90년대	2000년대
10,824	129	4,501	1,931	3,204	1,059

[간이상수도 취수원 현황(2004년말 현재)]

단위 : 개소

계	지하수	계곡수	용천수	기 타
10,824 (100%)	8,671 (80.1%)	1,700 (15.7%)	283 (2.6%)	170 (1.6%)

〈 노후급수관 초소형로봇 활용 갱생·교체 〉

□ 일반현황

○ 추진배경 : '11년까지 세계 5위권의 환경기술에 진입하기 위해 "차세대핵심 환경기술개발사업(ECO-STAR 프로젝트)" 일환 추진

○ 사 업 비 : 1,240억원(정부출연금 650억원, 민간부담금 590억원)

○ 사업기간 : 2005 ~ 2011

○ 참여인력 : 621명/년

○ 연구분야 : 3개 분야, 10개 중과제, 27개 세부과제

① 막분리 고도정수기술 상용화 기술개발

② 상수관망 수질관리 기술개발

- 초소형로봇 활용 상수도관망 진단, 갱생·교체기술 및 신소재 개발 등
  ⇒ 노후 옥내급수관의 획기적 개선기술 상용화

③ 수영용수(2급수) 수준의 하·폐수처리 기술개발

□ 추진일정

○ 1단계('04.12~'05.5) : 기술개발 기반구축

○ 2단계('05. 6~'07.5) : 기술개발 및 통합시스템 개발

○ 3단계('07. 6~'09.5) : 시스템 최적화 및 시범 사업화

○ 4단계('09. 6~'11.5) : 시스템 상용화

□ 기대효과

사회적 측면	기술적 측면	경제적 측면
· 수영이 가능한 수질 확보 · 주민친화적 하수처리장 공원화 · 국가신용도 및 국가 경쟁력 제고	· 고효율·저에너지·집적형 고도정수처리 기술 및 시스템 상용화 · 관망 수질최적화기술 개발, 관련 산업 활성화 · 소재 및 제어 기술의 국산화	· 고도정수분야 국산화 기술 및 상수도 산업육성 · 상수원주변지역 첨단산업 입지 가능화 · 국내·외 시장 확보 · 환경시장 활성화로 신규 고용 창출

6 4대 환경경영기법 확대 보급
(환경리스크 평가, 환경보고서, 환경회계, 환경성과평가)

□ 현 황

○ 해외 선진기업에서는 '80년대부터 친환경 기업경영을 핵심과제로 추진

○ 국내에서는 '90년대 후반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친환경 경영기법을 부분적으로 도입 추진

□ 필요성

○ 기업운영 전과정에서 환경성을 고려하는 환경경영은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

○ EU의 제품 환경성 규제 등 국제동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품생산 전단계에서 환경성을 고려할 필요

○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의 환경경영 도입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므로 국내 기업에 적용가능한 친환경경영 가이드라인 개발·보급 필요

□ 그동안 추진사항

○ 선진 환경경영기법 보급 확산을 위해 '01년부터 4개 환경경영기법 시범사업 추진

- 환경보고서 : 기업의 환경비전 및 전략, 현황 및 성과·계획 등을 대내·외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는 보고서
- 환경회계 : 기업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비용(Cost) 및 효익(Benefit)을 평가함으로써 기업의 원가절감 및 이익을 제고하고,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영기법
- 환경성과평가 : 선정된 지표(Index)에 따라 기업의 환경성과를 평가하는 기법

- 환경리스크평가 :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여신(與信) 및 수신(受信) 활동에서 당해기업의 환경리스크를 고려한 평가를 수행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과정

○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환경경영기법 가이드라인의 보완 및 현장적용 확대를 위해 현재 4차 시범사업 추진 중

〈친환경경영기법 보급 시범사업 현황〉

구 분	계	1차시범사업 ('01.9~'02.4)	2차시범사업 ('02.7~'03.4)	3차시범사업 ('03.8~'04.4)	4차시범사업 ('04.8~'05.4)
계	130	15	31	34	50
환경보고서	51	15	10	13	13
환경성과평가	38	-	15	10	13
환경회계	27	-	6	6	15
환경리스크평가	14	-	-	5	9

□ 향후 추진계획

○ 환경보고서

- 1~4차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'05.4월부터는 환경친화기업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발간 유도

○ 환경회계 및 환경성과평가

- 현재 추진중인 제3차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환경회계 및 환경성과평가 가이드라인 개정('05.4)

- 2006년도 시범사업 추진예정('05.8월부터)

○ 금융기관의 환경리스크평가

- 현재 추진중인 제2차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환경리스크평가 가이드라인 개정('05.4)

- 2006년도 시범사업 추진예정('05.8월부터) : 국민은행 등 5~6개 금융기관 참여 예정

□ 기대효과

○ 선진 환경경영기법의 개발·보급을 통한 기업의 환경경영 확산

○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정착을 통하여 국제규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

7-1 국민 혈중의 중금속 농도 및 환경성질환 실태조사

□ 현황, 경위

○ 최근 대기오염 심화로 인한 **호흡기 질환자의 급증**, 경남고성 및 경북 군위 카드뮴 오염으로 인한 **이타이이타이병 발병** 의혹, **실내공기 오염**으로 인한 새집증후군 등 **환경관련 질환 급증**에 따른 국민불안 증대

- 산업국가 전체 질병중 25% - 33%가 환경오염에 기인(WHO)

□ 문제점, 개선 필요성

○ 이는 기존의 환경정책이 대기, 수질, 토양 등 **매체중심의 환경관리** 위주로 실제 **수용체인 사람의 건강**관점에서 접근이 부족하였기 때문

- 이에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**국민전반의 건강상태**를 **조사, 감시**하고, 이를 **오염관리 정책에 반영**할 수 있는 **기초 조사사업 추진** 필요

○ 특히, 국내의 경우 환경오염에 기인한 **국민건강 상태에 대한 기초조사**가 **부재**하여 오염지역과의 **비교기준**이 없으며, 아울러 정책의 **우선순위 설정과 정책의 성과평가**를 **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**

□ 추진방향, 계획(일정포함)

〈 국민의 혈중의 중금속 농도조사 〉

○ **사업기간 : '05.4월 ~ '05.12월(8개월)**

- 조사 및 분석기간 : '05.4 ~ 10월(6개월)
- 분석자료 정리 및 해석 : '05.10 ~ 12월(2개월)

※ 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병행

○ **조사항목**

- 위해성이 높고, 환경중 중금속 오염의 대표성이 높은 혈중 **납(Pb), 수은(Hg), 카드뮴(Cd) 3종**

○ **조사대상 : 전국 10세 이상(또는 20세 이상) 2,000명**

- 조사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**통합조사구 200개를 활용**하되, **샘플수는 2,000명을 통계학적으로 대표성을 갖도록 추출** 활용

○ **면접 및 설문조사**

-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, 직업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등 **환경노출 설문조사**

〈 공단, 도시, 농촌간 환경성 질환 실태조사 〉

○ **주요 사업내용**

- 지역별(도시, 농촌, 공단지역)로 주요 환경성질환 발병실태를 조사, 지역별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도와 비교, 분석

○ **조사항목**

- **암, 천식 등 폐질환, 아토피** 등 주요 환경성 질환

○ **조사방법**

- 건강보험공단 등의 의료보험 자료 및 설문조사 자료와 대기오염도 등 환경오염도 자료 활용

□ 기대효과

○ **환경보건 관련 조사의 기준자료로서** 전국단위의 **대표성이 있는 중금속 농도 기준자료 및 환경보건지표** 확보

○ 매 3년마다 지속적인 조사로 국민혈중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**중금속 농도 변화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**

○ 환경오염과 질환 발병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함으로서 환경성질환의 사전예방 대책 강구

7-2 민감계층 사용 제품의 유해성 규명

□ 추진배경

○ 최근 어린이 칼라풍선, 주방용 PVC 장갑 등 화학물질이 함유된 어린이·여성 등 **민감계층 제품**에 대한 관심 및 **유해성 우려 증가**

※ 칼라풍선에 환각성분 검출 보도('04.12 KBS)

※ PVC 장갑에서 환경호르몬 물질 검출 보도('05.2.20 MBC)

○ 선진 각국은 화학물질(chemicals) 관리정책을 **유해물질 함유제품(products)으로 확대 추세**

- EU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지침(RoHS), 제품의 생산·유통·폐기 전과정에서 환경영향을 감소하기 위한 통합제품환경정책(IPP)

□ 문제점

○ 민감계층 사용 유해우려 화학제품에 대한 현황 및 사용, 노출실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미흡

○ 유해물질 함유제품 관련부처, 법령의 다원화로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대응체계 미비

- 환경부(유화학물질관리법), 산업자원부(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), 청소년보호위원회(청소년보호법), 재정경제부(소비자보호법), 노동부(산업안전보건법) 등

○ 유해물질 함유제품의 생산·유통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미흡

□ 추진계획

○ **가정용 유해우려 화학제품 목록작성 및 위해성 평가 실시**

- 내분비계 장애물질, 납 등 유해중금속을 함유한 가정용 화학제품의 선진국 규제동향,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대상제품 선정('05. 6)

- 제품 사용량 조사 및 노출실태를 평가하고, 유해성 여부에 대한 안전성 시험을 연차적으로 실시

※ 유해물질 함유제품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 예산('05년 7천만원)

○ **어린이 등 민감계층 사용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추진**

- 어린이용 장난감, 문구 등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협조, 모니터링 실시

- 어린이 유해용품관련 관계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, 소관 법령정비 등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(붙임 참조)

※ **칼라풍선**은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로 「**청소년유해약물**」로 지정하여 **판매·대여·배포 금지**조치 예정('05 상반기)

- 유통업체와 협조, 납품단계에서 유해성 사전검증제 도입 추진

○ 생산자·시민단체·전문가가 참여하는 **화학제품 위해성 평가단 구성·운영('05.10)**

- 유해우려 화학제품 모니터링·선정, 제품의 유해성/사용형태/노출실태 평가 및 정책자문